

광주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 20만원

市,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지원 확대... 17만여 가구 341억 투입 장기요양기관 260곳 특별지원... 업소 4만4000곳 요금 분할납부도

광주시에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등 정부 지원이 슨며지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까지 에너지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29일 "취약계층과 0-5세 양육 가정 등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16만 7641가구(개소)에 총 34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정책과 함께 정부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기존 사업(6개 사업 110억원)에 7개 사업 231억원(국비57억원·시비174억원)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가장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

외돼 혜택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763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총 75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또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6223가구에 93억원(가구당 20만원) 지원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광주시는 영유아 양육 가구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 긴급히 지원 근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260개소에 대해서도 1개소당 난방비 4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미 시행중인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등도 확대한다. 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해 어린이집

(940곳) 냉난방비 지원액을 1곳당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경로당(1365곳) 지원액은 18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 4000여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해양에너지와 협력해 3개월 분할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 부모 등 3만5017가구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 2000원(1인 가구 기준)에서 30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추가 인상은 국비(56억 9000여 만원)만 투입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지원책에 더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에 한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빈집 1492호·철거 대상 185호

市, 상반기부터 매입 등 정비

광주 도심에 방치된 빈집만 1492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자치구와 함께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구 410호, 서구 193호, 남구 363호, 북구 208호, 광산구 318호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후·불량 상태, 위생성 평가 결과 1등급(양호) 208호, 2등급(일반) 615호, 3등급(불량) 484호 등이었으며, 안전 등을 고려해 철거가 시급한 4등급은 185호였다.

도심 속 빈집은 각종 폐기물 투기에 따른 주변 지역 위생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장소 제공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일단 올해 25억원을 들여 매입, 철거, 안전조치 등 빈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빈집 정

비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 텃밭 등 공동 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3년 이상 토지 사용에 동의하면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빈집 797호를 정비(매입·철거·안전조치)했으며, 2024년까지 빈집 788호를 관리·정비하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웅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빈집은 소유자가 유지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시민안전과 위생 정비가 시급한 빈집에 대해선 소유자와 협의 등을 통해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어업인 전기요금 73억 긴급 지원

전남도, 지난해 4분기 인상분 50%... 14만8000가구 혜택

전남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다.

이는 최근 유가와 각종 농어업 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가계 운영과 영농·영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고통 경감을 위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

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농가 14만6000가구가 평균 3만5000원을 지원받고, 어가 2489가구가 평균 88만5000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만8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접수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최종 확인 후 3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저소득층 총력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실·국별 업무보고회'에서 각 실·국의 신규·역점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전기·가스 요금 급등에 따라 고통이 커지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에 대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시의회 '민생안정·경제위기 극복' 협력

제2차 광주전략회의 재정운용 논의 예산 편성·심의시 협의 정례화 약속 '경제위기 극복' 3월 조기 추경 추진

지난 연말 추경심의 과정에서 대립했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추경 편성에 합의하는 등 화해의 두 손을 맞잡았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심의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29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정무장 시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장, 운영역 국회의원, 안도걸 시 재정경제자문역 등이 참석해 '제2차 광주전략회

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시의회는 ▲원활한 예산 편성·심의 위한 대원칙 마련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채무관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공동 노력 등 안건을 논의했으며, 예산 편성·심의 단계부터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와 시의회는 또 민생안정과 경제위기극복 등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3월 조기 추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지역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문화, 안전, 환경, 인문 분야 등으로 국비

발굴 분야를 다양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무장 시의회 의장은 "경제 한파로 시름하는 민생을 보듬기 위한 협치와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 관련 협의 정례화, 3월 조기 추경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운용 전략을 함께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전략회의'는 시정 주요 결정권자인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이 참여하는 정책논의 플랫폼으로 회의 주제에 따라 국회의원,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노후 관광지 3곳 재생사업

道, 시설 개보수 등 60억 투입... 다음달 24일까지 공모

전남도가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곳을 선정, 모두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전남에는 관광지 27개소, 관광단지 6개소, 관광특구 2개소 등 총 35개소의 관광평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지정 30년 이상 시설이 14개소에 달해 최신 관광 추세를 적용한 체험형 감성 시설과 콘텐츠로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는 2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시·군 사업 신청서를 받아 전문가 심사

를 거쳐 1차 6개소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3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3개소에는 도와 시군이 각 50%를 부담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전남 고유의 매력에 담긴 우수한 관광지를 지속해서 조성하는 등 전남 방문의 해 관광객 1억 명 유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개소 183억원을 투입해 지역관광 활성화 힘썼다. 이 가운데 해남 땅끝 관광지는 관광노후시설 개선과 탐방로 개보수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탐바꿈해 지역 관광평소로 거듭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